

토론회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

일시 : 2020. 9. 9(수) 10:00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주관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 김경협 · 어기구 · 김주영 · 이수진(비례)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 김형동 · 박대수(비례) 의원

프로그램

10:00 ~ 10:10	<p>개회사 및 인사말</p> <p>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의원</p>
10:10 ~ 10:50	<p>좌장 :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p> <p>발제</p> <p>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p>
10:50 ~ 11:30	<p>토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현주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1:30 ~ 12:00	<p>종합토론 및 질의응답</p>
12:00	<p>폐 회</p>

※ YOUTUBE 온라인 녹화 중계 www.youtube.com에서 '한국노총' 검색
(유튜브 -> 한국노총 -> 동영상)

목 차

[개회사]

김동명_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4
-------------------------	---

[인사말]

김영주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
김경협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
어기구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
김주영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
이수진_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12
임이자_국민의힘 국회의원	13
김형동_국민의힘 국회의원	14
박대수_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	16

[발제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	21
_ 김윤호(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토론문]

고현주_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37
이승용_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41
조오현_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46
채준호_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47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의 노사민정이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뒤로 양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노사상생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방향을 찾고자 오늘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진행 실태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어기구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박대수 의원님께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님께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념, 관련 국내외 사례, 그리고 사업의 발전 방향과 노동조합의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해주실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님께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시어 노동조합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실 고현주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사용자측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부측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채준호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기준이 노사상생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혁신도 담보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 신설된 상생협의체가 1년 동안 가동되지 않아 노동조합과 지역 주체들이 사업의 추진 경과조차도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왜곡된 노동시장 개혁, 상생의 노사관계 촉진이라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의 설계, 추진, 실행 및 이행점검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산업 현장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노총도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사상생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지역 협의체 구성 등 다각적인 지역조직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단위 노사민정협의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노사상생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토론회의 좌장 및 발제, 토론을 맡아 수고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 9. 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동 명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김영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로 인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도시의 경제 상황은 더욱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 기반이 열악한 지역 중소도시의 경우 내수 경기 둔화는 물론, 인구 감소,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이 필요합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은 지역의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지역 산업이 쇠퇴한 상황에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모델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을 발표하고, 상생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지난 6월 정부의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3,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을 일부 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장이 되길 바라며, 저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더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추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영 주

인 사 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경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및 과정을 공유하고, 노사정 주체별 역할을 논의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미비한 문제를 찾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론을 모은다고 하니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은 지역사회에서도 노사정이 뜻과 지혜를 모은다면 지역단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단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노사와 지역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매개체로 지역사회를 새롭게 바꿔내는 거버넌스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노사정이 서로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맨 처음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에 뒤를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등도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노사민정 거버넌스의 전국적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지역에서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하지 못 할리 없습니다. 부천의 중추산업이 전통 제조업과 4차산업 혁명을 결합하는 뜻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이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등이 충분히 논의되고 중론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비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을 비롯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 9. 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경 협

인 사 말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산업·일자리 혁신의 기폭제 되길”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기구입니다.



오늘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행사준비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소임을 맡은 바 있습니다. 특위 활동을 꾸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관계기관과 상생형지역일자리에 관심있는 지자체 등과 의견교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졌습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실험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발의한 ‘상생형지역일자리 3법’이 올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적 뒷받침도 마련했습니다.

상생형지역일자리는 노·사·민·정의 지역사회 경제주체들 간 산업과 일자리, 지역균형발전 등의 의제를 대화와 타협의 힘으로 추진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전국 1호 상생형지역일자리로 광주형일자리가 선정되었고,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전북, 부산 등에서도 지역경제 구조에 맞는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이 발굴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의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 그에 딸린 노동의 위기, 침체된 지역경제 등 공동체 문제를 타개하는데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중요한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전보다 더 진전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전략과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의 본격적인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풍부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 9. 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 기 구

인 사 말



여러분의 영원한 동지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께도 위로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성장 잠재력 저하,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신산업 발굴 지체, 고착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선 경제주체 간 양보와 타협이 필수적입니다.

양보와 타협은 ‘상생협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광주에서 그 가능성을 마주했고, 밀양과 대구, 구미, 횡성, 군산, 부산에 이르기까지 7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각인된 중요한 사실은 과거 통상적인 기업의 투자,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의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이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단위 노·사·민·정의 협력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이와 같은 상생의 경험은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촉진제로 발현할 수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도출한 대안은 이해당사자 간 양보와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기회를 늘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업과 노동시장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와 협약을 수반하면서 신뢰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만들어간다면 지속가능성은 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저도 앞으로의 일자리 모델에서 자칫 ‘상생’이란 가치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동지와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중앙연구원 동지들, 그리고 한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주 영

인 사 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몇 차례 경제위기를 맞으며 노동시장에도 굵직한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학자 등 관련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입니다. 이해관계인들은 물론 곳곳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답을 찾고 있지 못합니다.

노동시장 문제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촉진 등 복합적인 시대 요구 아래 하나의 해법으로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2019년 이른바 광주형일자리와 관련된 노사민정 합의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산업 투자유치를 선택한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구미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대구, 부산, 밀양 등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 노사 상생, 나아가 친환경 미래산업을 준비하며,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노동의 요구와 다르지 않기에 노동자들의 참여 의지도 큼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오랜 논의를 반복하던 중 사실 노동계는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 임금 하향평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노사정 당사자들이 우려를 딛고 결심까지 이끌어낸 새로운 시도가 성과로 귀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참여 주체인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들이 역할을 하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를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노사정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9. 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 이 수 진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본격화 일시휴직자 증가폭은 외환위기(IMF) 때보다 더 높고 일자리 타격을 받은 대한민국 경제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와 잠재력 저하로 인해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고용상황을 타개하고 오래갈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협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 단위 노·사·민·정의 협력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하므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돌파구가 제시할 수 있고, 지역에서의 상생 경험은 국가 단위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일자리 창출 모델을 유도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협약 체결이 필수입니다.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제공하고 노·사 상생협약을 준수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여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동력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어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노총출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고현주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 이승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님,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님,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시간을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0. 9. 9.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 이 자

인 사 말



여러분 환영합니다.

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기나긴 코로나19 사태로 심신이 지쳐계신 와중에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님과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김윤호 고려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함께 토론을 통해 고견을 주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님, 고현주 부천시 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관계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속 경제상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문제가 국가와 지역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도시로 경제성장과 수출에서 한몫을 차지했던 일부 지역들에서는 공장들이 이전하거나 폐업하면서 심각한 고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지역의 일자리 기반을 다지고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지역 명칭을 담은 'OO형 일자리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 경제주체의 관심 고조는 저성장 시대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멍니다. 지난 2017년 첫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등장한 이래 수많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본 취지인 '상생 실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의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을 통해 노동과 기업, 지역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남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과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9.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 형 동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대수입니다.

먼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경제와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라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를 위해 발걸음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장기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여, 비수도권의 고용상황은 더욱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인구의 수도권 밀집’ 및 ‘비수도권의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노·사·민·정 간의 합의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들은 각 지자체와 기업의 투자협약 및 정부 지원금 지원형식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역할은 빠진 반쪽짜리 ‘상생’이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모델들의 분석을 통해, 노·사·민·정 모두의 뚜렷한 역할과 목표 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노·사·민·정의 역할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주일 교수님과 김윤호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9.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 박 대 수

토론회

발제문

발 제 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과 노동조합의 과제*

2020.9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윤호

* 본 발표자료는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의 2020년 연구과제(연구자:김윤호, 김기덕) 중간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연구보고서의 구성

- 개념적 검토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개요/정부의 평가
 -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개념/평가들
 - 유사모델 검토, 중위 코포라티즘
 - 노동조합 재활성화 전략
- 해외사례
 - 기존사례검토: 미국GM의 새턴, 독일VW의 AUTO5000
 - 신규사례발굴(노조역할 관련): 호주의 태지메니아 지역, 영국의 티스 밸리 지역, 캐나다 토론토 마운트데니스 지역
- 국내사례
 - 추진현황, 거버넌스 설문조사, 심층사례연구(광주, 군산, 구미, 울산)

개념적 검토의 시사점

일자리의 양적 확대인가? 아니면... 일자리의 질적 혁신인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11조의2 제1항
 -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9. 2. 21)
 -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①지역주체 간(노·사·민·정) ②상생협약을 체결하여 ③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④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일자리의 양적 확대인가? 아니면... 일자리의 질적 혁신인가?

- 사업의 핵심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지역 경제주체들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역투자촉진 → 일자리의 **양적확대**: 지역경제주체들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짐
- 일자리의 **질적 혁신**(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원하청 관계 개선, 작업장 혁신 등): 지역 경제 주체들은 혁신 대안 마련을 위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가 필요 (단기적 접근 어려움)

양적 확대와 질적 혁신의 균형적 동시추구!!

-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원형을 다시 보기
 - “혁신(*innovation*)에 기반한 자동차산업의 신규투자유치 도모 및 그것이 가능토록 하는 차별화된 전략적 연대(*solidarity*)의 활성화를 통하여, 광주지역에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그를 통하여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사회통합적으로 개혁하여, 그러한 개혁의 방법론이 타 지역 및 타 산업으로 확산되도록 도모하려는 방법론적 접근”*
- 노동시장 개혁의 방법론, 또는 사회통합 지향적인 생산체제(*social integration -oriented production regime*)으로 개념화
- 광주형 일자리도 투자협약 과정에서 ‘노사책임 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의 의제가 일부 퇴색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의 모습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지 우려
- 노동조합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전략마련이 필요한 시점

한국노동연구원. 2015.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광주광역시.

양적 확대와 질적 혁신의 균형적 동시추구!!

-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4조 제4항관련 '상생형지역일자리 타당성 평가 기준'
- 투자규모가 크거나 투자능력이 크면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
- 형식적인 상생협약을 통해 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구조는 아닌지??
- 현재구조에서 '노사상생'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가? 선정 이후, 노사상생의 가치는 유지될 수 있는가?

상생형지역일자리 타당성 평가 기준(제4조제4항 관련)

□ 타당성 평가 기준

- (상생협약 : 30점) 상생협약 체결의 충실성,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상생협약의 기여도 등 평가

* 상생협약의 충실성(이해관계자 참여도, 절차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10점
 투자 도출, 노사·원하청 관계 개선, 주민 수용성 제고, 사회적 대타협 등에 대한 상생협약의 기여도 20점
- (일자리창출 : 30점)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수를 정량적으로 평가

* 800명 이상 : 만점(30점), 500-800명 : 25점, 300-500명 20점, 200-300명 : 15점, 150-200명 :10점, 100-150명 : 5점
- (지속가능성 : 40점) 투자규모, 지역적·사업적·재무적 타당성 평가

지표	배점	비고
투자규모의 적절성	10	설비·지원시설 100억원 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 50억원 당 1점) 토지매입 200억원 당 1점
지역산업 편익	10	지역 특화·유망산업 해당여부(7점), 지역의 투자여건(3점)
사업적 타당성	10	사업계획 이행가능성(6점), 국내산업 기여도(4점)
재무적 타당성	10	과거 재무실적(2점),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3점) 내부수익률(3점), 투자 완료시점(2점)

□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최저 기준

* 총점, 상생협약, 지속가능성 분야 아래 각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총점) 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 (100점 만점)
- (상생협약) 상생협약 평가 결과 15점 이상 (30점 만점)
- (지속가능성) 사업적 타당성 지표 중 사업계획 이행 가능성 4점 이상 (6점 만점)

노사민 등 주체들의 대표성은??

- 국내에서 거시(macro) 코포라티즘 보다 중위(meso) 코포라티즘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들이 존재
 - 지역단위의 높은 공감대 형성 가능성(지방소멸, 지역 산업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공통된 위기의식 등),
 - 지역발전을 위해 형성되어 있는 높은 수준의 신뢰와 사회적 자본 등
 - 지역의 특정 산업이나 업종수준에서 산업 및 노동정책의 형성과 조정, 집행 및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용이 할 것
- 노사조직 모두 지역단위 대표성은 매우 낮은 상황
 - 지역단위 노동조합 조직률은 많아야 10~20% (민주노총의 불참을 고려하면 더욱 낮은 조직률)
 - 사용자 단체 또한 대구, 울산, 인천 등 산업화 수준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15% 미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일자리 협약구조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낮은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 속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 어떤 대안이 이해관계자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지에 따라 의사결정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대화와 토론, 소통을 통해 서로의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
 -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평등한 참여와 포용, 공공선을 목표로 한 토론과 설득, 쟁점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충분한 공유, 자신과 상대의 선호에 대한 개방적 자세, 다수결이 아닌 충분한 토론을 통한 합의형성의 요소들을 포함
 - 속의과정을 통해 채택된 의제들이 지자체와 투자기업간의 협약과정에서도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도 속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의제의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

조효래. (2007).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노동조합 내부정치와 토의민주주의. *산업노동연구*, 13(1), 209-239.

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 수단: 상생형 지역일자리

- 노동조합 재활성화(union revitalization)의 방향들
 - 조직화 모델(organising model) 적용
 - 전통적 서비스 모델의 폐쇄성 극복
 - 공동체 노동조합주의(community unionism) 전개
 - 시민사회화의 연대
 - 노동시장의 내부자와 외부자 문제(insider/outsider problem) 해결
 - 청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해결에 적극적 의지
 - 하이로드 방식(high-road)의 파트너십(partnership) 전략
 - 고숙련, 기능적 유연성, 참여형 노사관계, 집단성과배분제 등을 통한 책임성

Murray, G. (2017). Union renewal: what can we learn from three decades of research?.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23(1), 9-29.

해외사례의 시사점

<해외 사례 주요문헌>

Fairbrother, P., Walker, M., & Phillips, R. (2018). Unions and regional governance: the case of North West Tasmania, Australia. *Regional Studies*, 52(11), 1502-1511.

O'Brien, P., Coombes, M., Dawley, S., Evans, L., & Pike, A. (2017). How to Create Great Jobs: Towards a Regional Industrial Strategy for Tees Valley: A Report for the TUC by the Centre for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Newcastle University.

Nugent, J. (2017). Struggling for good green jobs in Toronto's Deindustrializing suburbs. *Unions and the City*, 189-218

새턴과 Auto5000사례의 시사점

- 환경적 위협에 대응하여 노사공동으로 착실한 준비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혁신공장을 해외 이전 방식이 아닌 국내 지역에 설립(proactive strategy) (새턴10년, Auto5000년 준비)
- 제품의 경쟁력과 노동의 인간화(humanization of labor)를 동시에 추구하여 전통적 생산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혁신적 성격
- 혁신공장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
 - 각 주체별 내부 조직적(intra-organizational)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 좀더 폭 넓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도 추진할 필요성

노동조합 과제도출 관련 해외사례

- 다수 국가에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주체들의 제도적 참여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 호주(Cradle Coast Authority(CCA)), 영국(Combined Authority단위의 Devolution Deals: LEP* 등) 지역 주체들간 파트너십을 통해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의 일부를 이양 받는 형태)
- 각 사례 노동조합별로 지역 거버넌스 참여의 적극성에 차이
 - 호주 테즈메니아 지역 노조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조참여 요청에도 본격참여 거부
 - 영국 TUC는 양질의 일자리 의제(great jobs agenda)**가 지역단위 협약에 반영되도록 정부로비를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 캐나다에서는 코닥이 철수한 지역에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창출 시도

*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

** TUC의 캠페인으로 공정한 임금, 정규 근로시간, 공정한 대우와 존중, 안전한 작업장, 그리고 학습과 성장의 기준을 제시

노동조합 과제도출 관련 해외사례

- 지역조직의 열악한 자원문제
 - 노동조합은 조직력, 현장조직들간의 연대, 지역활동을 위한 전문성과 시간적 여유 등에서 열악한 조건
 - TUC는 총연맹 차원에서 지역단위 노조조직 지원활동 전개
 - ✓ 노동조합의 지역 단위 거버넌스 활동이 노동자 계층에게 도움이 된다고 표명
 - ✓ TUC 지역위원회 (regional councils)는 지자체 리더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포용적 경제성장 도모
 - ✓ 양질의 일자리 의제 캠페인에 지역기업들의 참여 유도
 - ✓ 다수 지자체들이 TUC의 일자리 의제에 지지를 표명
 - ✓ 각 지역간 지역 거버넌스 정보공유, 노동자 목소리 반영 노력, 공공 인프라 투자/사회적 조달 장려, 노사상생의 가치 지지, 학습과 숙련 향상, 평등과 다양성 가치 확산 노력
 - ✓ 지역의 노동조합 대표자 및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확충노력

노동조합 과제도출 관련 해외사례

- 노동조합 내부의 이념적 갈등 가능성: 거버넌스 장애요인
 - 특정 업종 노조의 정책참여가 다른 업종 노조의 반대에 직면하는 사례: 건축노조 환경보호정책 참여 → 광업관련 산업자체 축소 → 관련 노동조합의 반대
 - 노조 내부 지역 및 산업별 수평적 조정기능의 필요성 제기
- 업종이나 부지의 선택과정에서 연계산업의 파급력이나 지역 산업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할 경우 지역 및 산업간 갈등 위험
 - 기존 노사 주체들의 특정 산업단지나 기업에게 특혜를 집중하는 것과 관련한 갈등 위험
 - 지역간 산업정책 조율 및 지역간/지역내 공론화의 필요성 제기

Fairbrother, P., Walker, M., & Phillips, R. (2018). Unions and regional governance: the case of North West Tasmania, Australia. *Regional Studies*, 52(11), 1502-1511.

O'Brien, P., Coombes, M., Dawley, S., Evans, L., & Pike, A. (2017). How to Create Great Jobs: Towards a Regional Industrial Strategy for Tees Valley: A Report for the TUC by the Centre for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Newcastle University.

Nugent, J. (2017). Struggling for good green jobs in Toronto's Deindustrializing suburbs. *Unions and the City*, 189-218.

심층 인터뷰 결과를 중심으로

국내사례의 시사점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부족한 자원

-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 ✓ 대부분 지역이 자동차산업 및 연계산업: 민주노총 조직률이 높음
 - ✓ 사업장이 중소기업인 경우 무노조 사업장 다수
 - ✓ 한국노총이 지역 노동계대표 위상형성에 어려움
- 지역 현장조직들의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지의문
 - ✓ 지역조직 리더십 중심의 활동
 -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의존, 구체적 의견수렴 미흡
- 전문인력확보 및 시간 할애의 어려움
 - ✓ 대부분 지역 1-2명의 상근인력(행정인력 중심)
 - ✓ 비상근 리더들은 상생협약에는 참석하지만 실무협의 참여도 낮음

지역조직 자원부족 한계 극복노력들...

- 전문가들과의 장기적인 학습을 통한 전문성 확보(광주)
 - ✓ 관련 연구용역 진행 시 적극적 참여하여 전문가들과 소통 및 학습
 - ✓ 관련 토론회에 빈번히 참석하여 학습기회 확보
 - 노동조합의 전통적 활동영역이 아닌 생소한 영역으로 중장기적 학습 필요
- 지역 시민단체 인사 연대 통해 인적자원부족 문제해결(군산)
 - ✓ 전문인력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역지부에서는 실무협의회 참석곤란
 - ✓ 노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통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지역조직 자원부족 한계점들

- 상생협약식에 형식적 참여우려
 - ✓ 대기업 투자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생협약체결
 - ✓ 사업추진을 위해 신설된 상생협의체는 거의 1년 동안 활동 전무
 - ✓ 상담소 인력을 중심으로 타 지역 벤치마킹 활동 등 노력
 - ✓ 추진경과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협약과 지자체-기업간 투자협약의 이원적 구조
 - ✓ 노동조합을 포함한 지역 경제주체들은 투자협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
 - 투명한 정보공유와 협력적 이행점검이 수반될 될 필요성 제기

지역조직의 총연맹에 대한 지원요청

-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
-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토론의 활성화 및 전문가 지원
- 지역협의체 구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 지역들간 정보공유화 협의 촉진
- 타지역 벤치마킹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예산과 인력 지원
- 중앙에서의 노사정대화의 일관성 유지

맺음말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을 통한 사회혁신 도모

- 외생적 지역발전 전략의 약점
 - ✓ 지역 외부로부터 대기업 유치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발전 잠재력을 훼손할 우려(환경파괴, 소득의 외부유출 등)
 - ✓ 대기업 본사가 중요 의사결정을 통제하여, 투자 지역내 양질의 고용창출이 어렵고 산업연관효과도 약할 가능성
 - ✓ 비숙련 노동력 중심의 생산방식 유지 시 지역 내 기술축적도 어려움
-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의 특징과 일자리의 질 향상 추구
 - ✓ 전략의 특징: 상향식, 지역특수적, 다주체 기반, 지역의 사회적 기반 등 제도적 측면 강조
 - ✓ 비경제적 요소를 희생해서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을 지역답게 하는 비경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동시추구
 - ✓ 독자적인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 강조

박경, (2008).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내생적 발전론, 사회과학연구, 47(1), 87-123.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 마련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는 비수도권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지역의 인구감소 수준 등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위기지역 지원정책이 있는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인구감소', '인구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려움
- 국가균형특별법상 인구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조항을 추가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과정이나 선정과정에 차별적인 지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지역단위 학습장려

-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지역의 경우, 노사민정간에 5년 이상의 장기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내생적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
- 하지만, 그 이후에 추진된 타지역의 일자리 모델의 경우 과도하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사민정간의 충분한 숙의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비판이 존재
-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년이상의 노사민정간의 토론과 학습이 선행될 때, 지속가능하고 파급력이 높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최소한 2-3년 또는 더욱 중장기적인 노사민정간의 숙의와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청
 - ✓ 지역 노사민정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역 노사민정간의 숙의와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인프라를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과 행정적 지원이 요구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노동조합의 과제

- 노동조합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준 마련
 - ✓ 지역의 상생협약에 포함될 구체적인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지역의 자율에 맡기되, 한국노총 전체 차원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서 반영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할 필요(예: 영국TUC 사례)
- 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필요
 - ✓ 파트너십 전략을 통해 생산성 혁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
 - ✓ 노동조합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능적/임금 유연성 수용하고 고용안정성과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이로드 방식 추구
-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수평적 조율기능 확대
- 노동조합 내부와 지역단위 숙의민주주의를 확대
- 다각적인 지역조직 지원정책의 마련 필요

감사합니다

투명회

투
명
회

토 론 문

지역상생형 일자리모델과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문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고 현 주

-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에 대한 개념과 실행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①지역주체 간(노·사·민·정) ②상생협약을 체결하여 ③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④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 2. 21)

- 일자리 창출 파트너십 전략 및 실행, 성공요인으로 노사민정 참여 적극적 역할 모색
 - 성공요인 : ①정부의 지역일자리 전략 ②노사참여, 주도성, ③지역 양질적 일자리창출 ④고용위기(지역적 영향력, 파급)
 - 국내외 사례 비교로 볼 때 국내사례의 경우 ①의 정책방향 하에 지자체 주도 제기로 시작, 국외사례로 보면 노사(기업)의 출발로 실행화로 나타남.

구분	지역	내 용
국내사례	광주형	(제기)시장(공약)+전문가(용역) (핵심)‘사회통합 지향적인 생산체제(social integration - oriented production regime)’
	밀양	(제기)지자체(Kick-off 회의) (핵심)「상생을 통한 선진적 뿌리산업 발전 모델 제안」 중소기업 클러스트

구분	지역	내 용
	대구	(제기)노사(AMS(구 한국델파이 고용위기) (핵심)상생펀드(노사상생, 원하청 상생 등 상생협력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해 고용안정과 신규 일자리 확대)
	구미	(제기)지자체+공론화(워크숍) (핵심)투자촉진형 일자리 모델이자 지속상생발전 모델
	강원	(제기)이모빌리티 연구조합 (핵심)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조합 구성, 지역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
	군산	(제기)노사민정 실무협의회(상생형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핵심)주력산업 붕괴로 인한 고용 위기→ 전기차 클러스터를 통합하는 전략 및 사업
국외사례	새턴	(제기)GM노사(노조) (핵심)생산방식과 노사관계의 혁신(백지상태 접근방식)
	AUTO5000	(제기)VW 노사(사) (핵심)5000*5000
	호주 NWT	(제기)노동조합협의회→ 태즈매니아 지부 (핵심)센터와 연대주의
	티스밸리	(촉진)국가지역산업발전전략 (제기)지역 당국+티스밸리 광역시장과 통합당국+영국정부+노동조합 (핵심)산업경제력(에너지산업), 포용적 전략, 지역 거버넌스
	토론토 마운트데니스	(제기)노동계가 주도한 RESPECT 캠페인+지역사회보장협정(노동+공동체) (핵심)지역 특화형 고용중심 녹색일자리와 공정성 결함

- 재활성화전략 과제, ①서비스 모델 중심에서 새로운 대상집단에 대한 조직화 (organising) 모델로의 전환, ②전통적인 단체교섭으로부터 작업장에서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변화모색, ③지역단위 경제발전을 위한 거버넌스(local governanace)나 시민운동세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④노동시장의 내부자와 외부자(Insiders and outsiders)간 격차의 완화 모색이라는 측면(불완전 노동자)로 제시
- 양대노총의 규약의 목적 실현을 위한 지역단위 의제, 실행사업을 구체화, 제시
 - 노조의 적극적 지역개입전략으로서 새로운 대상집단에 대한 조직화 (organising) 모델로의 전환(민주노총)은 긍정적이거나 아직 자기 조직화에 머무르는 한계를 갖고 있다. 미조직 근로자의 조직화는 조직 근로자와 미조직근로자의 격차 완화, 전체노동자의 권익 신장 등을 통한 지역조직의 지역 내 영향력, 대표성을 확보

*1999년 부천노총의 지역개입전략(낮은 조직률, 지역개입전략으로 지역 영향력을 기반으로 대표성 확보)

- 이의 목적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역노사단체의 규모, 예산, 전문역량과 고용훈련에의 참여경험과 성과공유 등이 필요로 한다. 지역지부의 역할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p>한국노총</p>	<p>제4조【목적과 사업】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노동조건을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 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9.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0.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11.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보상사업 12.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남북노동자의 연대강화를 위한 활동 1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14.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생활조건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p>제11조【시·도지역본부의 목적】 시·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지역 내의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지역 내 노동자의 공통적인 이익을 증진시킴과 아울러 가맹조직의 일상 활동과 소속연맹의 요청이 있을시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지도·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민주노총</p>	<p>제4조(목적과 사업)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민주세력과 연대 강화 2. 민족 자주성의 확립, 민주적 제권리 확보,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3.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 확대 강화 4.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확립, 산업별 노조 건설,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5.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 분쇄,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 6.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 확대, 직장내 비민주적 요소 척결 7.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 개선

	<p>8.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쟁취</p> <p>9.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과 농업 보호</p> <p>10. 사회보장,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 제도 정책 개혁</p> <p>11. 국제연대와 인권신장 및 세계평화의 실현</p> <p>12. 이상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선전, 출판활동</p> <p>13. 기타 민주노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p>
--	---

□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제안

□-1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의 노조의 참여기준과 역할 제시

-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 참여기준과 역할에의 명확한 명시(협약의 이행)
-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에서의 역할 부재(컨설팅사 중심의 과제수행 방식)
- 단기적 일자리창출 도출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 지역과제로서의 접근이 요구

□-2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의 노조의 인식전환 과제

- 노사공동결정제도화 노력이 필요함(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단체교섭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작업장 혁신을 위한 파트너로서 전환, 나아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 지역단위 고용노동파트너십으로의 역할과 기능 전환
- 지역지부 및 지역본부의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내 역할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전문화, 예산 확보
(예)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복지관 역할개선(전국 노총조직 거의 대부분 위탁운영)
- 정부 일자리 재원 활용을 기반으로 지역조직의 일자리 훈련의 경험과 성과 축적으로 역량 강화 제시, 지자체 일자리 훈련 파트너로 인식. 작은 경험을 통해 성과축적, 노조의 역할 제고가 가능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등 신설이 요구됨
(예)부천노총 : 노사공동훈련사업(노사공동법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원년부터), 경비교육(경찰청 의무교육), 근로자복지관 운영

지역 노사 역할 제고는 경험의 축적과 교육밖에 없다. 재구조화 전략으로 중앙노총의 기본 과제로 의무교육과정 규정화 '사회적대화학교, 학위이수',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가과정 필수이수', 중앙정부는 지역노사의 참여, 주도적 실행이 가능한 지원사업 개발, 참여 견인으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참여 인식전환의 계기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토 론 문

지역상생형 일자리모델과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문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 이 승 용

1 의의

- 상생형 일자리(광주형) 모형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노사상생 문화 확산 등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내 갈등의 원인이었던 다양한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일부 기여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지역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 교섭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의미 있는 사례
 - 산업 분야 중 특히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대립 일변도의 노사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시도로 지역 구성원 간 자체적 협의를 통해 접근한 것은 의미가 있음.
 -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던 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모델을 마련, 향후 기업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2018년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140개국 중 15위인 반면, 노사협력 부문은 124위로 최하위권¹⁾

* 2017년 기준 광주광역시 내 사업체수는 총 11만 8,409개소로 2012년 10만 5,931개소 이후 연 2.25%씩 증가, 동 증가율은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1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²⁾

1)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2018.10.16

2)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참고함. 한편 사업체수 증가율 1위는 세종시 15.53%, 17위는 서울시 1.05%로 나타남.

□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노·사·민·정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 사업 추진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의 복지 혜택 제공 등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 새로운 해법 가능성 제시
- 2018년 기준 광주광역시의 전체 고용률(15~64세)은 64.6%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 청년 고용률(15~29세)은 39.4%로 10위를 각각 기록³⁾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매우 중요한 현안
- 근로자 생활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등 복리후생 비용을 정부가 지원, 민간부문의 과도한 임금인상 자제 및 임금 경쟁력 확보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지방정부가 주도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은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우수인재 및 전문 인력 유입에도 긍정적 효과 기대

□ 산업 경쟁력 제고

-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자동차 산업은 국내외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와 경직적 인력운용, 대립적 노사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국내 신규 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

2017년 기준 완성차업체의 평균연봉은 한국 9,072만원으로 일본 도요타(8,390만원), 독일 폭스바겐(8,303만원) 등 글로벌 경쟁사보다 높고,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12.29%) 역시 도요타(5.85%), 폭스바겐(9.95%)을 상회

* 2015년 기준 자동차 1대 생산 소요 시간(HPV) : 현대차(26.8시간), 도요타(24.1시간), GM(23.4시간), 포드(21.3시간)

-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국내 자동차업체가 임단협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방지하고 안정적 생산 및 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함. 한편 15~64세 기준 고용률 1위는 제주도 73.7%, 17위는 부산 62.9%이며, 15~29세 청년 고용률 1위는 인천 47.9%, 17위는 전북 31.7%로 집계됨.

2 보완 과제

-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동계의 적극적 동참
 -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계의 **근로조건 악화, 노동권 약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 시각 존재**
 - 향후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대승적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적극 지원 필요**
 - 국민세금과 민간자본을 합해 약 5,700여억 원을 투입, 내년 2021년에 설립 완료, 생산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노사갈등을 비롯한 위험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상생형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한편, 국가세금과 민간자금의 투자손실도 우려되는 상황
 - 자동차 산업 자체가 위기인 만큼, **지역적인 기득권 논쟁에서 탈피해 노조와 회사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선진적 노사관계 형성**이 필요

- 경영성과 극대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선진 경영시스템 정착
 - 노사 협약을 통한 상생모델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설법인 경영진의 **효율적 구성,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될 필요
 - 한정된 예산 및 인건비 범위 내에서 **능력 있는 경영진 확보, 사무관리 직원의 생산성 제고,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선진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 검토

- 시장수요 및 생산 경쟁력 확보 문제
 - 낮은 인건비를 토대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생산제품이 어느 정도의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상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최근 경차에 대한 시장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국내 경차 판매량이 12만7천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 10만대에 이르는 경형 SUV 차량이 시장에 신규 공급될 경우 시장 수요 창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 수요 부진 하에서 민간시장과의 경쟁이 불가피,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이 어려울 경우 **판매실적 부진의 위험도 존재**

* 일각에서는 합작법인의 경형 SUV 생산이 민간 자동차회사의 고객들을 빼앗아가 매출 감소를 가져오는 **자기잡식 효과(Carnnibalization effect)**도 제기

* 경차 판매량 추이 : 186,702대(2014) → 173,418대(2015) → 173,008대(2016) → 138,895대(2017) → 127,429대(2018)

- 또한 국내 자동차 산업이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국 경차의 국내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광주형의 경형 SUV를 비롯해 국내 업계에 상당한 타격도 우려
- 이에 기존 경차 시장과 확연히 구분되는 경형 SUV의 새로운 판로 개척이 필요하며, 전기차,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차량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역량 구축도 필요

□ 채산성 악화 등 경영위기 도래시 대응전략 보완

- 경형 SUV의 시장 판매 부진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전략(ex 생산차량 변경, 생산물량 감축, 소속근로자 고용조정)이 부재함.
- 중장기적으로 생산공급처, 판매처 등을 다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 다각화도 병행되어야 함.
- 국내 경차 수요 감소 추세 속에서 새롭게 경형 SUV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 전기차를 비롯해 경쟁력 있는 차종 생산을 위한 제조라인 변경 및 투자 방안, 전문인력 확보 및 노동생산성 제고 방안 등
- 한편 국민세금에 기반한 정부 출연이 상당부분 투입되는 만큼, 향후 방만경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

□ 타 지역·산업·분야로의 협력사례 확산

-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바람직
-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감소(연 7% → 2.8%)하고 단위노동비용 증가 속도가 급증(0.8% → 2.2%)해 글로벌 추세와 상반되는 흐름

* 주요 41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전후로 연 3.4% → 3.5%로 상승,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연 6.0% → -1.7%로 감소(한국노동研, 2019.2)

-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른 지역이나 산업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 노사정의 협력 강화 이외에도 생산제품의 성장 가능성, 지리적·산업적 특성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할 필요
- 최근 다양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지속 발표되고 있으나, 정부 지원에 기반을 둔 사업 모델을 국내 경제에 일반화시키는 것은 민간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도 존재
- 정부가 투자유치를 주도하며 복리후생과 같은 혜택을 정부가 지원하는 측면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위험*도 있는 만큼 시장 질서를 준수하면서 기업 투자를 늘리는 방향의 정

책이 보다 바람직

- ‘지자체간 경쟁적인 모델 발굴’을 지양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 재정자립도, 조세부담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투자 적정성 검토**, **원활한 협의채널 구축 방안** 등 요구
- 해외 사례처럼 직업훈련, 외자유치 등 상생 모델의 다변화도 검토 필요

* 1990년대 초 미국 위스콘신 지역(‘High-road’ 전략), 2000년대 초 미국 텍사스 지역 (공동훈련센터 설립)은 직업훈련을 통한 생산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 1980년대 후반 아일랜드 코크시는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외자 유치에 성공하여 산업 도시(의약, 화학, 의료장비 등)로 전환, 지역위기 극복,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지역 노사관계 안정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⁴⁾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 사례요약집; 장흥근,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의 현황과 과제, 2009 참조

토 론 문

지역상생형 일자리모델과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문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조 오 현

토 론 문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과 노동조합의 과제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채 준 호

1 문재인 정부의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 문재인 정부는 지역 일자리 정책에 있어 지역 내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광주형 일자리모델』의 확산을 추진 중에 있음. BUT 중앙과 지방의 온도 차이
- 광주형 일자리모델: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통합 프로세스라는 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 구축을 통하여, 스스로의 논리를 뛰어넘어 노동과 경영 각 주체의 동시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노사파트너십)를 형성하고, 그 사회경제적 동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상호신뢰, 책임성 공유 및 혁신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경쟁력강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라는 상생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지역 고용.경제모델

넓은 사고와 시각	새로운 사고와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을 통한 효율 향상 • 정부 주도, 일방적 계획 • 장시간 근로 • 수출, 중후장대 산업, 대기업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 혁신을 통한 고용위기 돌파 • 지역 거버넌스, 지역기반 고용정책, 참여/연대/소통을 통한 합의 • 숙련향상을 통한 단위노동비용 저하, 노동의 인간화, 일 가정 양립, 삶의 질 향상 • 내수 기반, 창조적 서지스업, 중소기업 중시
<p>* 지역거버넌스의 중요성 : 다양한 민간영역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p> <p>** 단위노동비용 :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비용. 명목노동비용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으면 단위노동비용이 높아짐</p>	

2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전북지역 사례]

- 전북지역 내 일자리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업 주도나 지방자치단체 주도 방식이 아닌 지역 내 여러 주체들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개발이 필요
- 지역 내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이 상호연계 없이 별개로 추진됐던 과거 관행을 뛰어넘어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
- 전북지역 내에서도 한국사회의 고용불평등의 여러 요소들, 즉 청년실업(노동시장 기진입자 vs. 미진입자), 원하청 관계(원청의 고용 vs. 하청의 고용), 고용형태(정규직 고용 vs. 비정규직 고용) 별 격차가 발견되고 있음 이는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 사회통합을 훼손하고 있음
- 과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관점이 기업과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간 조정역할을 간과하거나 고용 창출의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이해당사자의 노력이 부족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등의 개입가능성 상실
- 특히 노동/일자리 정책(예산과 정책)의 중앙 집중화로 인한 지역 내 노동/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노정
-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 정책의 권한부여와 여러 사회주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 이를 위한 주체들의 역량강화와 주체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에 직면

3 지역 주체들의 역량 문제

- 상생형 지역일자리 = 과거 기업위주의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 내 여러 주체들의 참여의 보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 광주형일자리 추진동력
 - : 기관장의 의지, 전문적 열정적 인적 인프라, 지역 내 거버넌스(노동계 전체를 아우르려는 노력)
 - ▶ 현재의 한계: 당초 추진하려던 원칙 퇴색 + 투자자 위주의 주도권

- 지역 노사정의 취약한 정책 역량: 노동계가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관련 정책을 고민이 깊지 않음. 민주노총은 정부 주도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해 부정적 → 소극적인 태도.
 - : 경영계 역시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관련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 지방자치단체 내 노동/일자리 전문가 부족(찾은 순환보직 + 외부 전문가 의존) - 전문계약직 형태로 노동일자리 전문가 채용 지원

4 현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의 한계 →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 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한계
 - : 노사민정 역할 부재 - 협약식 등 행사위주의 운영
 - 지역 현황 해결에 있어 문제의식 결여, 정책 역량 한계(예: 2018년 군산공장 폐쇄)
- 지역 인적자원위원회의 한계
 - : 관련 정보 공유의 한계 기존 유관 기관 위주의 지역 일자리(지산맞) 사업 추진
 - 노동부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전략?
 - 일자리 예산이나 인적자원개발 예산은 이들 기관 대표 들이 모인 회의나 위원회에 서 결정 → 지역내 기관의 이해관계의 결합

5 대기업 유치 위주의 일자리 정책

- 지역 내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서 창출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으로 대기업 유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함
 - : 예) 전북지역 00산업 질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고급 인력이 차지
 - 지역에서는 저임금 위주의 지원인력 창출이 대부분
- 각종 지방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위주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6 자치단체장 인식제고 /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모색

- 현 지방자치단체장 대상 지역 상생형 노동/일자리 정책 인식 제고방안 강구
: 자치단체장 대상 지역일자리 창출 시 검토사항
서울 / 광주의 지역일자리 창출 정책 사례 소개
- 지역 내 일자리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가칭 “지역일자리 전문가 과정“ 운영 (고용정보원 or 노사발전재단)

7 각종 일자리 사업의 조율

- 지역차원서의 다양한 노동/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필요
노동부사업, 산업부 사업, 지자체 사업, 여가부 사업, 중기부 사업 등(상이한 예산, 성과경쟁) → 전북일자리재단 설립 검토(?)
- 중앙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 일자리 정책의 조율 가능한 컨트롤타워 필요
예: 지엠군산공장 폐쇄 이후 고용노동부, 노동연구원, 고용정보원, 노사발전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 비효율적 예산 운영
→ 일자리위원회/경사노위 “상생형 일자리 특위“ 구성(?)

8 서울 등의 모범적 지자체 일자리·노동정책 벤치마킹

- ✓ 서울, 2016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설치 (3개 담당 14개 팀 체계)
 - 일자리정책담당: 일자리정책, 청년일자리, 공공일자리혁신, 뉴딜일자리, 고용훈련
 - 노동정책담당: 노동정책, 노사협력, 노동복지, 노동권익개선, 노동보호
 - 사회적경제담당: 사회적경제정책, 사회적경제기반조성, 사회적경제육성, 협동경제
- ✓ 서울, 「노동존중 특별시」와 「일자리대장정」그리고 청년보장
 - 2016년부터 매년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발표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서울모델,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 등의 조례 기구 설립-운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권익센터 및 노동복지센터/근로자복지관 운영, 노동복합시설 조성, 노동자권익 보호(마을노무사, 시민명예노동감독부즈만), 서울형 근로시간 단축 & 노동이사제 추진, 대리기사 등의 쉼터 개설-운영...
 -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 ❖ 기초 지자체의 고용전략 모범사례 참조-전파 촉진:
- 원주시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지자체-대학 주도)
 - 완주군 로컬푸드시스템 구축과 자생적 고용 성장

8 지역일자리 창출 성공의 전제 조건

-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
- 지역 내 키맨 & 키그룹[키맨+전문가(산업정책&고용정책) 그룹] 주도의 추진
- 자치단체 내 일자리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 개편(예: 서울특별시 & 광주광역시)
- 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연구 추진(예: 2015년 광주형일자리 연구사업)
 - 지역 산업 현황, 지역 내 임금수준, 지역 주체들의 역량 분석, 일자리 모델에 대한 의견 분석
- 지역 주체들 주도의 모델 개발 -노사민정 간 협의와 합의
 - 각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예: 광주형 일자리 혁신학교)
- 지역사회의 공론화 작업
 - 공론화를 위한 정례적인 정책간담회, 워크숍, 원탁회의 등을 추진, 공론화 위원회(예: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 운영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단체의 역할 분장 명확화

